

# 기초수급자 '눈덩이'...코로나19로 계층격차 더 커진다

## 코로나푸어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 매달 2~3만명 증가  
차상위 등 수급자도 올 2월 이후 증가 반전  
소득격차 확대...2분기, 단기책 착시 가능성  
회색빛 전망 지배적... "지원 사각지대 많아"**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사회 내 잠재한 불평등을 자극했다는 평가가 상당하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창궐 이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는 늘고, 구조적 소득 불평등은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국내 집단감염이 만연해진 이래로 한국 사회의 빈곤과 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표들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복지포에 공개된 국내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수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매달 2~3만명 수준의 증가 폭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12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수는 많아 수천명에서 1만명 안팎의 증가 폭을 보였고, 가장 많았던 3월에도 2만1210명이 증가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1월에만 1만7237명이 늘었고 2월 2만3018명, 3월 2만8855명, 4월 3만2959명, 5월 2만8909명, 6월 2만3977명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중복 통계를 제외한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수의 경우 지난해 등락을 거듭하다가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순감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 2월 2411명으로 반전

하기 시작해 3월 4936명, 4월 9167명, 5월 8918명, 6월 7313명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들어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크게 늘어난다는 집계는 사회적 빈곤이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다.

빈곤 확대와 함께 분배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표도 존재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1~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1분기 소격차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가구원 수를 고려한 1.5분위 평균 소득 비율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비율'은 1분기 5.41배로 전년 5.18배보다 0.23배 포인트 늘었다.

이는 국민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 가운데 하나로,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 정도가 크다고 해석된다.

2분기의 경우 4.23배로 전년 4.58배보다 감소했는데, 이는 재난지원금 지

급에 따른 일시적 효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일례로 정책 효과를 뺀 것으로 볼 수 있는 2분기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비율은 8.42배로, 전년 동기 7.04배보다 1.38배 포인트 증가했다.

이를 토대로 2분기 지표상 소득 불평등 개선은 단기 처방에 의한 착시일 소지가 있고, 코로나19에 의한 구조적 빈곤 심화는 진행형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시선이 있다.

국외에서도 코로나19 대응행은 이미 각 사회에 고착화된 불평등 구조를 악화시키는 방아쇠가 됐고, 많은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다수 나오고 있다.

일례로 세계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7000만~1억명이 일수입 1.9달러 수준의 극빈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개발계획(UNDP) 분석, 영국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 연구 등 또한 코로나19 국면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더 큰 위협이라는 방향의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회색빛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취약계층은 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대응 역량을 소진한 다수가 일상상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분석 등이 존재한다.

아울러 지금도 사회보장 제도 밖 사각지대에서 생계 애로를 겪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견해도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 수록 불평등 심화,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고 최근 노숙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며 "공공부조와 그동안 무관하게 살아왔거나 수급 자격을 얻기 힘든 경우도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임금이 낮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던 이들이 먼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적 접근이 어려운 이들이 많은 만큼 코로나19 시기에 보다 지원 문턱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은 질병이나 재해 등 노출이 쉽

고 영향도 1차적으로 받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국가 전반에 미치지 않겠지만, 대응 역량이 부족한 하위-취약계층의 경우 직접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할 수록 경제가 악영향을 받고, 그로 인한 충격은 불평등하게 가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하위 계층에 대한 영향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면서 계층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스

## 실버세대, 이중고... "감염 무섭고 갈곳 없고"

**"경비 3명 뽑는 곳 수십명 몰려"  
전문가 "노인 고용 거의 울스톱"  
근로 희망 노인 67.4% "생활비"**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손모(71)씨는 10년 전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버스 운전사를 시작했다.

A씨는 올해 상반기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둔 뒤 다시 취업을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아예 업무 자체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심각해지고 60대 이상인 일명 '실버세대'는 감염 우려와 구직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라도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사망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두려움의 정도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연령별 비율은 60대 이상이 90% 이상이다.

충남 대전에 거주하는 A(67)씨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평생 교직에 몸을 담다 지난 2015년 정년퇴직해 연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에 머무다보니 아내와의 다름이 찾아지고,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 올해 초 구직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실�했다.

A씨는 "지역사회를 통해 갈만한 자

리들은 이미 은퇴한 선배들이 모두 꿰차고 있다"며 "아파트 수위를 찾는다는 말에 연락을 했지만 3명을 뽑는 자리에 수십명이 몰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금생활하면서 생계형 노인들의 일자리에 욕심을 낸다는 편견까지 (주변에서) 들었다"며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자식들도 밖에 나가지 말라는 말을 하더라"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모집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코로나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지난 7월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기준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 1427만1000명 중 장래 일자리를 원하는 비율은 67.4%로 1년 전보다 2.5%p 상승했다.

그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8.8%로 가장 많았으며 '일하는 즐거움'(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이

33.8%로 뒤따랐다.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 소장은 "노인들은 지금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외부 출입자체가 불가능해져서 취업, 아르바이트 등 고용이 거의 울스톱이라고 보면 된다"며 "하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텐데 60세 이상 간신히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이 머물

곳은 없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우려되는 건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대면접촉이 어려워지니 무인으로 사람 통제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노인 사망률이 오르는 만큼 고용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   |  |  |  |
|---|--|--|--|
| <b>호남신문</b> www.i-honam.com   |  | <b>대표전화 (062) 229-6000</b>                   |  |
|   |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  |
| <b>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b>   |  |  |  |
| <b>동부취재본부</b>   |  | <b>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b>       |  |
| <b>서울취재본부</b>   |  | <b>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b>  |  |
| <b>기사계보 (062) 222-2580</b>  |  | <b>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b> |  |
| <small>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small> |  |  |  |
| <small>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small>  |  |  |  |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